

野와의 소통·타협 필요... “분열정치 끝낸 대통령 되겠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 강조
與野 대표들과 오찬... 현안 논의
與, 관용·자제 통해 野와 대화해야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범여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각종 쟁점과 현안에서 소통과 타협을 기반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그야말로 거대 야당과 싸우기만 하다 끝났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행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법안을 폐기시키는 과정을 수십번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뉴스스

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등 총 42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2위의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재임 16년 동안 총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짧은 시간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혔는지 보여준다.

야당이 입장을 좁히기 힘든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이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명분과 주도권 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줬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정국 전환을 꾀했으나, 결과

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당의 참패로 거부권 정국을 계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폭탄을 날리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1건을 발의했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기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정권 종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술한 불통과 정쟁의 시간을 겪어온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제21대 대

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역할과 야당과의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히 여당이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 간에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야당의원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상대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가지고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식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소상공인·中企 지원 ‘탄력’... “경영부담 분담·40兆 벤처투자시장 창출”

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대책 등 마련
中企·벤처기업 AI제조혁신 추진
대선 공약서 노란봉투법 개정 약속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선 때 내놔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약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시장 공정 거래 및 상생 질서 확립 등이 대표적이다.

벤처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창출과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제조 혁신,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가 대선 기간 중 전방위로 건의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강력 반대해왔던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등은 기업 현장의 바람과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줬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코로나)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불법 계엄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비용에 대해서도 나라가 분담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했다.

배달, 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화’ 이슈는 소상공인 업계나 이재

명 정부 모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건의했다.

새 정부는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면서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투자 풀 벤처투자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부(BDC)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AI 투자 100조원을 통해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한 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해 제조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선 산업계와 이재명 정부간 온도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3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 ‘개정’을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IBK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